

시장경제와 한국의 농업(下)



성진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지난호에 이어〉

Ⅲ. 시장경제논리와 농업생산

농업부분에도 시장경제논리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많은 농업경영체와 농관련산업체,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 당하거나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려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냉엄한 경쟁질서 속에서 경쟁력이 약한 경제주체는 도태되어 퇴출당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주체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사업예산도 '98년도에 16.8%, '99년도에 22.7%나 크게 줄어들고 있고 보조사업 예산은 감축되는 대신에 융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지원내용도 전환되고 있다.

IMF로 인한 세수(稅收)부족의 탓도 없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고 모든 시장선택과 시장경쟁의 책임을 생산자가 지도록 해야한다는 시장경제논리의 영향 속에서 진행

되는 일인 것이다.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원론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이론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특히 농업부분은 산업의 특성상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심하게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무차별한 시장경제이론의 적용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현상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농산품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시장에 방임하면 농업부문의 급속한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체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위협 받게 된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또한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소비를 크게 늘이지 않는다. 가격과 소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양만큼의 농산

물만 소비자는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낮다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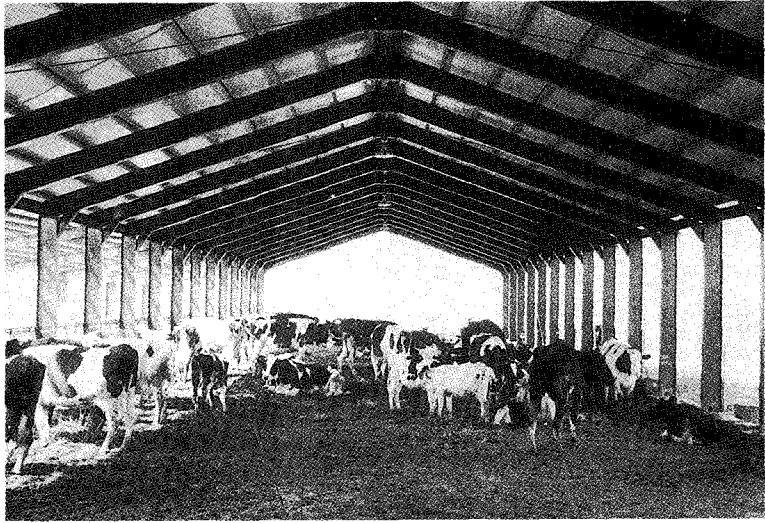
그러나 농산물의 공급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큰 폭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소비는 늘지 않는데 생산만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곡물공급과잉시대가 지배해온 '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국제 농산물가격의 상대적인 하락현상의 주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은 비농산물가격에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면서 점차 그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협상가격차(鉅狀價格差 : Schere현상)라고 한다. 이러한 농산물의 상품적 특성 때문에 농가소득은 위축되고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물리게 된다.(向都離村)

오늘날 미국, EU, 일본 등 시장경제가 발달한 대표적인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은 텅빈 농촌과 과밀도시공간의 문제인 것이다. 농업을 시장경제논리에 지나치게 방임한 결과이다. 시장경제논리가 만능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지지정책이 선진국 농정의 큰 축이 되고 있다. 농업보호비용보다 농업의 위축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후생손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을 통찰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반생산되는 다양한 공익적(公益的)인 기능이 농업생산의 위축과 함께 동반위축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인 후생의 손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농업생산자는 농산물이란 상품을 생산하고 농산품을 판매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간다. 농산물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으로 국가경영에서 필수적인 식량안보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농업생산자가 소득이 낮아서 식량 생산을 포기 내지 축소하면 그 영향은 국가의 식량안보기능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홍수를 예방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지하수를 함양하고, 초록공간을 유지하는 등의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생산하여 국민경제에 무보수로 공급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가격의 크기로 환산되어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도 없고 거래도 되지 않는다. 단지 농업생산의 위축과 함께 위축될 뿐이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Multifunctionality)을 UR협상에서는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 Non Trade Concerns)이라 불렀으며 자유무역 추구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여건 하에서 생산되는 농업의 NTC적 기능이 존속되도록 배려하는 예외적 조치들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농업을 시장기구의 작용에 방임하면 농업의 NTC기능도 위축되어 국민경제는 이에 대신할 새

로운 비용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이 또한 중요한 시장실패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NTC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논리는 만능적인 처방이 결코 아니다. 농업생산을 진흥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시장실패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장경제논리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분야는 수익률이 제조업부문보다 2~3%정도 낮다. 또한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투자회임기간도 길다.

이 때문에 시장에 방임해 두면 양질의 농업자원은 농업부문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도, 땅도, 돈도 모두 농업을 떠나려하는 마당에 시장경제원리만을 강조한다면 결국 국내농업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

부족한 농산물은 해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터이지만 국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농업의 다기능성은 어떻게 생산하여 국민경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쳐야 한다.

왜 시장경제의 꽃을 피운 선진국에서조차 한사코 자국농업보호시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을 신장에 내놓고 적자생존을 기다린다는 시장경제만능적인 시책은 결코 옳은 선택이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산업이든지 시장경쟁에 맡겨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은 농업에 대한 정부역할의 축소, 보호적인 조치들의 완화, 시장개방의 촉진 등에 대한 논리와 주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농업도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승부를 가리도록 해야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집약이 된다.

IMF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의 능률화, 생산성 제고, 비용절

감, 자기책임의 강조 등의 처방은 농업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은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겠는가?

먼저 급선무는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식량·농업의 참가치를 알려야 한다. 농업이 생산하는 상품 이외에도 환경 등 다면적인 소비자 서비스기능을 공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의 실증사례들을 잘 알려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경제의 능률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알리고 그 실적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농업 자체의 큰 자기조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으로 생산성과 산업의 능률을 올리는 일에 나서야만 한다.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또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는 세계농업개혁과 시장개방의 조류에 대응하는 문제 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급변하는 경제를 보는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 농업은 스스로 경영혁신에 나서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Ⅳ. 시장경제원리 속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무차별적인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은 결국 우리 농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농업부문은 산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방임할 경우 바람직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마련이다.

농업의 위축은 농업인의 소득 위축으로만 끝나지 않고 농업부문이 생산하는 공익적 기능마저 동반하여 위축시키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마저도 궁극적으로 저해시키게 된다.

IMF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는 혼란도 걸

국 쌀 부족사태 때문이었다지 않는가? 중국 양쯔강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업화를 위한 강변 평야지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논의 홍수조절기능의 약화 때문에 이번 대홍수의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 결과도 있지 않는가?

농업부문도 예외없이 시장경쟁에 던져놓고 적자 생존을 기다리자는 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대신에 시장에 방임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규모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방임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농업규모가 지속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감소만큼 먹거리 불안, 홍수비용 부담 등의 형태로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해서는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이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정부개입에 의한 적정 규모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통찰력있는 정책의지가 아쉬운 것이다.

첫째, 경쟁력 있는 농업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과연 무엇이 경쟁력 있는 정책인가? 그것은 밖으로는 농업생산의 공공재(公共財) 생산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납세자를 설득하여 소득보상적 지불정책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효율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정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한 농정의 모습은 어떠해야할 것인가?

첫째, 식량안보의 중요성에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와 농업인력 등 필수적인 생산기반은 여전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효율을 강조하다보면 식량안보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식량안보기능의 약화는 결국 전체 국민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을 보전·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사업과 낮은 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한 소득보상정책을 위한 재정을 납세자를 설득하여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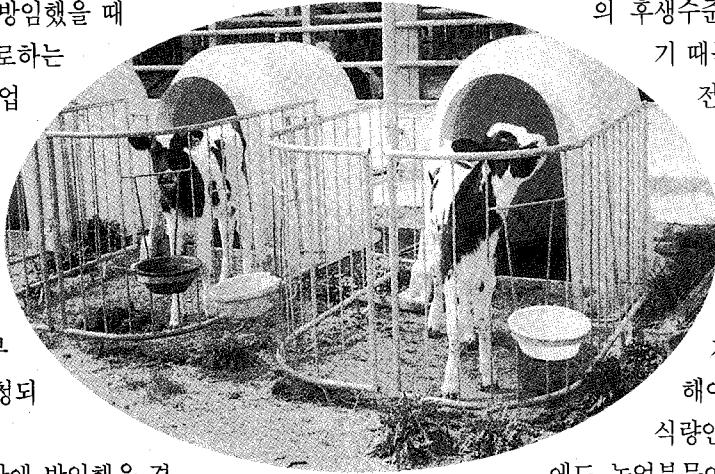
식량안보적인 기능 이외

에도 농업부문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국토와 환경보전기능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시장경제하에서는 이 크기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된다.

예컨대 금년 여름 대홍수 때 한강 잠수교의 위험수위와 충주호의 만수수위가 교대로 TV화면에 비춰지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충주호 수위가 만수상태 이하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한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쌀 농사가 효율이 없기 때문에 포기되었다면 논둑에서 빗물을 담아서 관리하는 기능마저 포기되었을 것이므로 충주호는 넘쳤을 것이고 한강 하류지역의 대홍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마철에 전국 논둑에서 담아주는 빗물의 총량은 충주호 홍수조절 수량의 4배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적인 국내농업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여 국내농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상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강력한 농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호효과가 큰 산지 등 조건불리지역농업의 보호를 위해서 산악국가인 스위스는 산지농가소득의 80%이상을 직접 지불소득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스위스의 산지농업이 발달하여 식량자급율이 64%나 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주도적이었던 경제성장추진과정에서 체질화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농정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농업에서는 경영의 개념도, 판매의 개념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가 사업시행주체와 작목을 결정하고 주요농업자재와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비를 보조하면서 농업경영질서를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주도해 왔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농업생산비와 소득 수준이 결정되었으며 판매는 정부와 농협에 맡기면 해결되는 오랜 전통속에서 농가들은 길들여져 왔다. 농가들의 정부의존도는 커졌으며 자생력은 취약해 질대로 취약해진 상태이다.

정부조직도 품목위주로 구성되어 농업생산의 전부분을 관리하는 큰 정부형태로 농정을 집행해왔다. 농정수행의 관리비는 커졌고 각종사업의 결정과 예산집행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향권을 행사하면서 부실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질서하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줄게 되고 모든 시장선택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고 생산자가 지게 된다. 경영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장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책임은 생산자

농업에 대해서는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이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정부개입에 의한 적정 규모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통찰력있는 정책의 지가 아쉬운 것이다.

그것은 밖으로는 농업생산의 공공재(公共財) 생산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납세자를 설득하여 소득보상적 지불정책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효율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지게 되고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살아 남거나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효율실현을 최대의 가치로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나서고 있는 농가들의 경쟁력향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장실패를 보상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

는 농업생산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의 모습인 것이다.

한국농업은 마야호로 시장경제화란 태풍의 한가운데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길 이외에는 달리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가 갖추어야할 첫번째 조건은 생산성이 더 높거나 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비가 더 낮은 농업경영체, 다시 말하면 생산의 효율성이 높은 경영체를 말한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두번째 조건은 소비자가 원하는 높은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는 일이다.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향상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지상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현재의 우리농업 경영규모는 농지를 중심으로 볼 때 1.3ha이다. 이를 10배 이상으로 키워서 15ha내외로 규모화시킨다는 정책구상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15ha 경영규모로 150ha가 넘는 경영규모하에서 생산되는 선진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의 소농규모하에서도 보다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보다 유리한 시장출하조건을 갖추고 보다 높은 값을 받아 남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들도 분명히 높은 생산비를 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품화과정에서 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있는 농가들이다. 사실, 자가소비(自家消費)를 목적으로 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던 시대에서부터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대로 우리의 농업생산질서가 바뀌게 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유통시장마저 전면 개방되는 유통상의 일대혁명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매장에다 풍부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고객위주의 편의성 제공을 내세우고 있는 외국 유통업체들은 값싸고 질 좋은 외국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각지로부터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유통혁명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잘 파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생산비 절감에 성공했다라도 농산물을 제대로 잘 팔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농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잘 파는 기술」 이것이 농

장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충분조건이며 우리농업의 제2의 경쟁력향상 수단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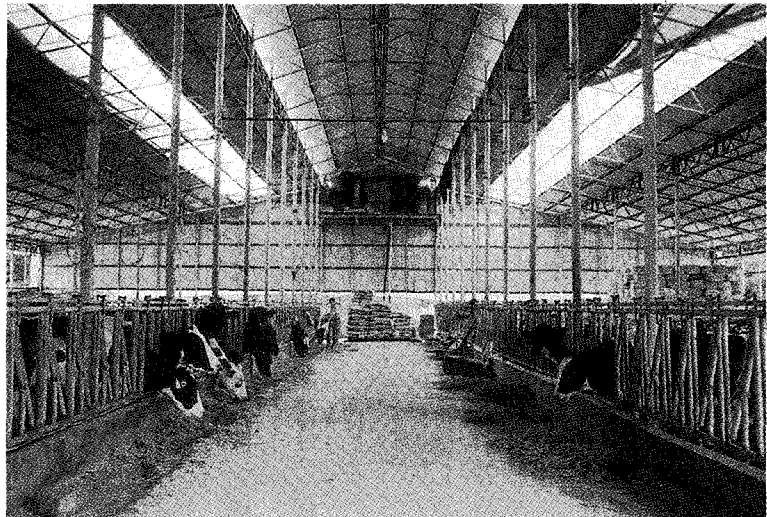
경쟁력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세번째 조건은 농가들의 경영관리능력을 함양하여 스스로 경영혁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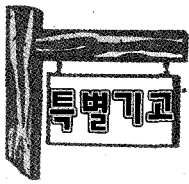
우리는 바야흐로 국경이 따로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소득을 올리는 모범적인 농가로 경영을 혁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제적 수준의 경영체와는 여러 가지로 격차가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내 경영체를 성공적인 경영체로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관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절에서 설명한 생산과 유통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경영분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뜻에서 훌륭한 경영관리는 경영혁신의 출발점이자 중착역이 되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사실, 소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겨우 이력저력 살아가는 우리 농업의 실정에 무슨 엄청난 경영관리가 필요한가라는 농촌현장의 질문에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체도 이제는 당당한 기업규모로 발전하고 있거나 발전하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노동, 자본 등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 자체가 경영이고 이를 보다 조직적으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에 우리농업 경영의 목표가 주어져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종래의 주먹구구식 태도를 버리지 않는한 우리에게 보람찬 내일은 결코 오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V. 낙농산업의 여건과 생산자의 바람직한 자세

1. 한국낙농산업의 여건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에 힘입어서 '99년의 우유소비는 '97년 소비수준(2,440천톤)보다 8%증가한 2,635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증가추세는 2,000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국산분유의 채고 감소('99. 9월 현재 분유채고는 3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감소)와 모조분유의 수입제한조치 해제로 유제품 수입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뉴라운드협상이 어떤 형태로 타결되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수

출국들은 심지어 농산물분야도 공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의 관세를 인하마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낙농산업의 살길은 경쟁력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의 경쟁력기반은 너무 취약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유 생산비는 미국보다 1.8배나 높다.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생산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료 자원부족에 따라 볏짚과 농후사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두당산유량도 낮기 때문이다. 한국낙농산업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유제품의 국제경쟁력 역시 대단히 낮다.

신선도 등을 이유로 수입이 안되는 시유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유제품의 원자재인 분유나 유가공품의 국제경쟁력은 지나치게 낮다.

생산기반의 취약함에 못지 않게 시유통체계마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쟁의 바탕마저 취약하다.

예컨대, 불공정한 집유선 쟁탈전을 비롯하여, 원유대금과 원유검사과 관련된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유판매량의 86%가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되는 등 유통마진도 지나치게 크다.

2.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생산자의 바람직한 자세

첫째, 낙농경영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전업낙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조사료자원기반을 확충하며 젖소개량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영규모확대의 목표는 최소한 일본 농가수준을 일차 목표로 잡고 청예작물이나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나아가서 신규 초기 조성 등을 통하여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

〈표 1〉 한국 낙농산업의 경쟁력

경쟁력지표	단 위	비교연도	한 국(A)	미 국(B)	일 본	비 율(%) A/B
원유생산비	원/kg	1995	413	226	-	183.7
두당산유량	kg	1998	6,099	7,713	8,488	126.5
호당사육규모	두/호	1997	31	85	48	274.2

※ 자료 : 농림부 축산경영과

〈표 2〉 분유와 유가공품의 국제경쟁력 비교(1999)

(단위 : 원/kg)

구 분	국내가격(A)	국제가격(B)	A/B	국산시세
탈지분유	6,400	2,064	3.1	3,500~4,000
모조분유	6,400	2,784	2.3	3,500~4,000
버 터	6,750	2,752	2.5	-
치 즈	7,590	3,263	2.3	-

주 : 1) 환율 1,200원/\$ 기준. 2) 국제가격 : CIF가격, 국내가격 : 공장도

※ 자료 : 농림부 축산경영과

서야 한다.

젖소 개량을 위하여 산유능력검정참여 비율을 현재의 17%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이상으로 제고시킴으로서 생산성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우유수급과 가격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낙농제도의 조기정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연결과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낙농진흥회는 젖소사육과 원유생산량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유소요량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원유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한 집유일원화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9개권역 17개 집유조합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권역조정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우유유통개선과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의 대리점 의존적인 우유유통체제의 지나치게 높은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가공협회와 백화점협회, 그리고 슈퍼체인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서 OEM방식으로 직공급을 추진하면서 대량소비업체에 대한 직공급, 우유소비저변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낙농자조금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과 조사연구 및 낙농기술향상과 소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경쟁시대에 스스로 활로를 열어가는 선도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㉞

(필자연락처 : 0431-261-2593)

KAnet

Korea Agricultural Network

농업, 생활 그 모든 것이란 슬로건 아래

- 생산 제품 소개 및 정보 제공
- 기업 광고 및 기술적 상담
- 홈페이지 제작 및 호스팅
- 공사 발주, 자재 구입 및 물품 구매

등을 본 사이트를 통하여 수주할 수 있습니다.

www.KAnet.co.kr